

독일 정부 출범 및 주요 경제정책 방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류 주 은 (fwd3270@kdb.co.kr)

- ◆ 제21대 총선 이후 한 달여간 협상을 거쳐 '25년 4월 9일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협정을 공식 발표
- ◆ 연립정부는 규제완화, 투자촉진,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부채제한 조항 개편,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신설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 '25년 2월 총선으로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 연립정부 구성

- 직전 내각인 '신호등 연정*'이 극심한 정책 갈등으로 해체된 후,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이하 "기민·기사연합")과 사회민주당 간 연립정부 출범 예정
 - * '21년 12월부터 '24년 11월까지 운영된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간의 연립정부
 - 제21대 연방의회 선거('25.2.23)*를 통해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이 원내 1당이 되었고,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연정 구성 진행
 - * 630석 중 기민·기사연합(중도우파) 208석, 독일대안당(극우성향) 152석, 사회민주당(중도좌파) 120석, 녹색당(중도좌파) 85석, 좌파당(극좌성향) 64석, 기타 1석
- 양당은 '25년 4월 9일 정책 및 내각 관련 연립정부 협정을 공동 발표하였고, 당별 동의절차(~4.29) 이후 기민당 대표 메르츠(Friedrich Merz)가 총리 취임 예정
 - 기민·기사연합은 친기업 성향에 부합하는 경제·에너지부와 함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무부를 담당하여 정책적 중심축을 형성
 -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민주당은 재정·노동·국방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처 담당

연립정부의 당별 내각 구성

구분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사회민주당
정부 수반(2)	총리	-	부총리
부처(17개)	총리실, 경제·에너지, 외무, 교육·가족·청소년, 보건, 교통, 디지털·행정혁신	내무, 과학·우주기술, 농림·지역	재무, 법무·소비자보호, 노동·사회, 국방, 환경·기후·원자력안전, 경제개발협력, 주거·건설
국무장관(8명)	연방·주 협력, 문화·미디어, 스포츠·자원봉사, 외무부 소속 2명	외무부 소속 1명	이민·난민·통합, 재무부 소속 동독특임

자료 : 기민·기사연합, 사회민주당('25.4), "연립정부 협정 : Verantwortung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한 책임)"

□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규제 완화, 세금 인하 등 추진

- 연립정부 협정은 독일 내 구조적 문제 해결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노동·재정·이민·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18개 분야의 정책 방향 제시
 - 경제·산업·재정 방면에서는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육성, 공공투자 확대 등 추진
 -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및 미래산업을 육성
 - 부채제한 조항* 개편, 5천억 유로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신설 등 공공투자 확대
- * 독일 기본법의 제109조·제115조에 의거, 연방 및 주정부는 균형예산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상황 제외 시 구조적 신규차입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해야 함

분야별 주요 경제정책 개요

분야	세부 내용
경제·산업·관광	· 1,000억 유로 이상 '독일기금'(정부 100억 유로 출자)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 탈탄소 전환지원 및 에너지 가격 안정화, 산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 (철강)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도입 지원, 2026년 EU 세이프가드 후속조치 마련 · (화학) '화학 아젠다 2045' 수립, 화학 플라스틱 재활용 지원 · (제약·의료기기) 국가 의약품 전략 강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생산환경 개선 · (바이오) 유전자 기반 기술 규제 완화, 바이오 창업을 위한 벤처자금 유치 환경 개선 · (반도체) 유럽칩스법(Chips Act),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 등 활용, 생산기지 육성 · (자동차) 기술중립성 유지, 전기차 세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전환 거점 유지 · (해양) 유럽 해양 전략 강화, 오프쇼어 플랫폼 생산 지원 · (우주) 우주 산업의 국가 전략 강화, 독일 우주 프로그램 확장, 민간 우주 기업 지원 · (조선) 조선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저탄소 선박 기술 개발, 해양 로봇 연구 지원 · 여행사 파산 보증제도 강화 및 교통 인프라 증설
예산·재정·조세	· 법인세율 5%p 인하('28년부터 매년 1%p씩 단계적 인하) · 3년간('25~'27년) 설비투자 감가상각 공제율 30% 적용 · 중산층 이하 소득세 감세 · 자발적인 연장 근무 시 수당 지급 및 세금 면제 · 전기세 인하, 송전시스템 비용 인하를 통한 전기요금 인하 · 기본법의 부채제한 조항을 전문가 위원회 검토를 거쳐 '25년 내 개편 ·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특별기금 신설

자료 : 기민·기사연합, 사회민주당('25.4), "연립정부 협정 : Verantwortung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한 책임)"

- 법인세 인하 및 공공투자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법인 명목세율*은 30% 수준으로 쾰른 연구소**는 법인세율 인하 시 향후 10년간 실질 GDP 360억유로, 민간투자 570억유로 증가 효과를 전망
 - * 법인세(15%)·연대부담금(0.825%)과 평균 14% 영업세로 구성, OECD 평균보다 6.5%p 높음
 -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e. V.(('24.2.2자), "Standortfaktor Körperschaftsteuer"
 - 독일 경제연구소*는 인프라 기금 운용 시 향후 10년간 GDP 수준 연평균 2% 이상 증가, '26~'28년은 성장률 기준 1.0%p, 1.5%p, 0.7%p 상승할 것으로 분석
 - * DIW Berlin('25.3.10자), "500-Milliarden-Euro-Investitionspaket würde deutsche Wirtschaft aus der Krise holen"